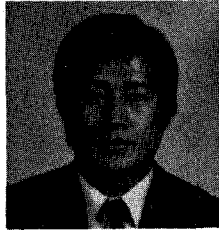


최근의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 (2)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최 대 휴

3. 향후 협상전망과 과제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상의 제반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다국간의 무역협상으로서 보다 더 잘정비된 교역체제하에서 서로간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결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모든 국가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협상에 있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농업구조가 다르고 농업이 갖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다르고 식량안보 등 경제적인 문제이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때 공산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사실은 수출국도 모르는바는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협상은 정치적인 신사협정을 맺자는 것이 아니다. 수출국은 수입국시장이 얼마나 더 개방되느냐에 따라 자국농산물 수출을 늘릴수 있는 반면 수입국은 얼마나 더 보호수단을 확

보하느냐에 따라 자국 농업정책의 목적을 자율적으로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깊은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실체는 현실적인 금전거래만 없을뿐 공인되어 있는 국가간 농산물 거래에 관한 흥정의 장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협상이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토의가 재개되었다는 사실이외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그 이유는 협상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의회의 『법안 신속처리 절차』의 기한 연장을 기다려야 했고 (☆. 미국의 대외통상교섭 권한은 입법부의 위임에 의하여 행정부가 수행하는 형태이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도 이 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권한 위임시한상 금년 3월1일까지 협상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부여되었었다. 그러나 협상이 연기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 권한 연장도 아울러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5월23, 24일 양일간 상, 하원을 통

UR협상은 분명히 타결될 것이며 타결될 모습은 폭과 기간등에
유동성은 있지만 국내보조나 수출보조등 농업지원의 동결과 감축,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될것이며, 아울러 농업의 본질에 비추어
적절한 보호수단과 지원수준은 계속 유지되도록 결정 될 것이다.

과함에 따라 2년더 연장이 되었다. 신속처리 절차란 이 위임된 권한에 의하여 추진된 협상 결과는 의회가 수정없이 수용할것이나 수용하지 않을것이나만 결정하는 권한만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C는 EC의 공동농업정책 개혁방향의 윤곽이 잡힐 9월까지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이후에가야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토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중에 던켈총장이 작년의 드류의장 초안 형태의 협상대안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가속화 시켜나갈수 있을것이라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이 협상시한뿐만 아니라 감축의 폭과 기간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지금까지 협상주도국이 상호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고 기존 입장을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마련하여 나가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없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실질적인 입장대립양상에 비추어 그러한 입장의 전환이 없는 한 농산물협상의 진전은 비관적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은 감축 목표설정에서 있어서 국내외의 가격차라는 방식 채택을 통하여 감축의무를 축소하려 하고있고 EC는 EC의 공동농업정책의 기본골격은 지킬 수 밖에 없고 이 기본골격하에서만 감축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케언즈 그룹

은 융통성없이 자유화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협상의 관건이 EC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나 지난 5월 15일 던켈 총장이 런던의 Atlantic Group회의 연설에서 협상의 교착상태는 미·EC 양국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공하고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 사실은 협상의 실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UR협상은 분명히 타결될 것이며 타결될 모습은 폭과 기간등에 유동성은 있지만 국내보조나 수출보조등 농업지원의 동결과 감축,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될것이며, 아울러 농업의 본질에 비추어 적절한 보호수단과 지원수준은 계속 유지되도록 결정 될 것이다.

4. 우리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지난10월 농산물 협상 그룹에 제출한 감축계획에 관한 우리입장(이를 오픈 리스트라고 함)에서 농가소득유지에 필수적인 품목, 식량안보 대상품목, GATT 11조 2항(C) 적용대상 품목들은 관세화를 통한 완전 개방을 할 수 없으며 이들 대상품목으로 쌀등 15개 품목(통상 NTC 품목으로 불려지고 있음) 제시하면서 감축대상품목도 7년간의 유예 기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쌀등 식

**합의되지도 않고 단지 토론과정에 있는 협상을 두고 이때문에
우리 농업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잘못된 인식, UR 농산물 협상을 통하여 언젠가는 합의될
의무 이행의 결과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대부분의 농업생산자 단체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막연한 반대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들은 한번 더 재고해야 할 것**

량안보 대상품목 이외에도 모두 수입을 완전히 규제하려는 것으로 오해가되어 상당한 거부감을 준것도 사실이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1월9일 대외협력위원회에서 기존입장을 다소 수정한 새로운 협상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내용의 골자는 ① 쌀 등 최소한의 식량안보 대상품목에 대하여는 개방예외의 입장을 계속 관철시키고 ② 생산 통제를 전제로 수입수량규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GATT 조항 (GATT 11조 2항 (C)) 을 개선되어야 하고 이 조항을 원용할 권리를 유보하며 ③ 기타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화를 수용하되 국내농업보호수준은 유지토록 하며, ④ 다만 감축대상품목에 대한 유예기간 주장대신 개도국 우대조치의 하나로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상 대책의 수정에 대하여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나 비록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게 마련이고 선발 개도국이면서 수입국인 우리의 협상여건이 전체적인 협상구도 아래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농업을 보호해 나가고 필요한 지원도 계속 되도록 하는 협상 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관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게 될것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협상타결에 대비, 우리농업의 구조를 혁신하며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농어촌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협상타결이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 협상 타결은 빨라야 금년말 또는 내년초로 예상되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대략 1년정도의 이행계획 수립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방과 국내보조의 감축은 92년 또는 93년 부터 착수될 것이다. 또한 이행에 착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당장 30%, 50%등 감축목표를 단기 기간에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10년정도의 기간 동안 일정율로 소폭씩 감축해 나가게되고 감축과 개방에 대하여 여러가지 예외가 인정될 것이므로 협상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우리 농업의 체질을 선진국농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협상대책과 국내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합의되지도 않고 단지 토론과정에 있는 협상을 두고 이때문에 우리 농업이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잘못된 인식, UR 농산물 협상을 통하여 언젠가는 합의될 의무 이행의 결과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임에도 대부분의 농업생산자 단체들은 자구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막연한 반대입장만을 제시하고 있는 현상들은 한번 더 재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업은 농민의 것만은 결코 아니다.

농업에 있어서 민주화, 자율화도 존중되어

야하고 전체적인 후생·복지차원에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도 필요하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본질은 비록 수출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농업생산과 무역에 정부의 개입을 과감히 축소하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정부개입 배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상당부분 수용이 불가피할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농민, 생산자단체, 소비자, 정부의 노력이 합치되어야만 우리 농업이 개방화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책의 시발점은 ① 농민 스스로는 경영규모 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한 과감한 상업농체제로의 개편을 서둘러야 하고 ② 농민단체는 이러한 농민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생산, 유통, 판매분야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③ 소비자는 생산과 소비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농산물의 특성상 농민이 필수농산물을 항구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는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소비자가 될 뿐이며, 수입으로 충당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농산물 구매의 선택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식량안보를 강조하고 있

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외 가격차를 볼 때는 생산자 보호에 중점을 둔 것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식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는 현재의 우리 농업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민족의 슬기는 결코 우리 농업을 좌절상태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통일을 지향하는 미래의 농업은 전체 한민족의 식생활을 책임질 줄 아는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보다도 사실문제에 근거하여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가 맡고 있는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농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우리 내부에서 부터 제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각자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91만국젓소 박람회 참관안내

우리협회는 미국에서 올 10월 초순에 개최되는 '91년 만국젓소 박람회에 참관할 회원농가를 모집하고 있다.

'91만국 젓소 박람회와 각종 낙농육우산업 관련시설의 견학 및 나이아가라폭포등 관광지도 관광하게될 이번 참관중의 여행경비는 7박8일은 160만원, 10박11일은 202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회 총무부(588-7055/6)으로 문의 바란다.